

민실위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최성혁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전화: 789-3883~6 팩스: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2022년 3월 8일(화)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령(是是非非)을 다시 생각한다

지난해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8개월간의 대장정 속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9일)로 종착지에 이른다. 민실위는 지난 8개월간 불편부당하고, 공명선거 실현에 이바지하고,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선거 보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민실위는 지난 1월 8일(D-60)부터 매일 선거 보도를 집중 모니터했으며, 모니터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이후 보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했다. 민실위는 선거 보도의 핵심이 양비(兩非)가 아니라 시시비비(是是非非)에 있다고 보고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했는지 되짚어봤다.

'혐오 대선' 속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중심추를 잡았다

네거티브, 막말, 후보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한다.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의제도 보이지 않았다. 자고 나면 후보 본인이나 가족 관련 새로운 의혹이 폭로되고 날마다 선대위에서는 거친 말들이 오간다. 도무지 찍고 싶은 후보가 없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많다.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는 사표론에 포획되어 '좋은 후보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하는 우울한 대선이라고 한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라는 정치학의 고전적인 명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치와 이념, 정체성은 몰각되고 날것의 승리 지상주의만 활개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심추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욱이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한국에서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의 의미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 이상이다. 대선은 지난 5년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선거 보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보 제공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민실위는 이번 대선 보도를 ①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②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③ 후보자 및 공약 검증 ④ 여론조사 ⑤ 공명선거 및 유권자 참여 유도 측면에서 살펴봤다.

의혹과 논란의 차이는 사실 전달이 아닌 확인에 있다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선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출발선이다. 그렇다고 의견은 없고 후보들이 말한 사실만 전하면 역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기계적 균형에 함몰돼 가치중립성에 머무르면 언론은 소위 확성기 노릇만 하게 돼 정당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말한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형식적 객관 보도가 의도치 않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의 사실을 따져야 하고,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① 고발사주 의혹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유력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 제기의 근거는 총장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이 작성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의원한테 전달해서 야당이 고발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이후 공수처 수사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면 심각한 '검찰권남용'에 해당되고 검찰조직과 범죄정보를 개인적으로,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한 셈이기 때문이다. 민실위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우리 보도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물론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 윤석열 검찰, 야당에 정치인·기자 '고발 사주' 의혹(9/2)
- 판결문 유출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윤석열의 '복심'?(9/2)
- 김웅 "기억나지 않는다"...윤석열 "사주한 적 없다"(9/2)
- [단독] '고발 사주' 손준성 공수처 이첩·검사 2명 기록도 넘겨(9/30)
- 대검내 조직적 가담 정황·수사 칼끝 윤석열 겨냥?(9/30)
- [단독]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10/6)
- "기억 안 나 당에 전달했을 뿐"김웅 거짓 해명(10/6)
- '고발 사주' 관련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박지원도 수사(10/6)
- [단독] "저희가"."남부지검에 내립니다"...'공모' 정황 곳곳에(10/19)
- [단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10/19)
- [단독] "선대위 명의로"."검찰에 항의하라"...김웅 구체적 개입(10/19)
- 증거 선명하데 더딘 공수처 수사·김웅 "국감 이후 출석"(10/19)
-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청구·내일 심사(10/25)
- 손준성 공수처 출석·두 달 만의 '고발 사주' 피의자 조사(11/2)
- '고발 사주' 김웅 10시간째 조사·여전히 "기억 없다" (11/3)
- '고발장 만든 '저희'는 누구?' 묻자·김웅 '동문서답'(11/3)
- 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12/3)

대표적으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통화 녹취를 보도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을 특정한 경우다. 당시 윤석열 캠프는 MBC 보도를 특정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반발했고, 방문진 이사조차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보도라고 깎아내렸다. 민실위는 당시 우리 보도가 여러 루트를 통한 교차 취재에서 확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한 정확한 보도이며, 만약 윤석열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부실 취재이고, 윤석열 이름이 있는데도 이를 검찰로 바꿨다면 '팩트 왜곡'이라고 본다.



- ▶ MBC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2021/1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429_34936.html
- ▶ SBS '고발장' 통화 복구..."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할게"(2021/10/6)

②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재명 '배임' 의혹 VS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대장동 의혹은 지난해 9월 민주당 경선 당시 처음 제기돼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지난 2일까지 이번 대선 내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사안이었다. 선거 초반 대장동 의혹은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초과 이익을 준 개발 특혜에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는지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5인방의 주요 발인과 관계, 주요 증거물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의 녹취록, 화천대우 대주주인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 발언,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처장의 잇따른 사망 등으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보다는 점점 확산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내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부분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씨의 누나가 사들인 사실 등을 바탕으로 윤 후보를 공격했다.

민실위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각자 유리한 내용만을 부각하는 가운데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정보, 충분히 해명된 것과 여전히 해명해야 할 것을 구분해주는** 게 공영방송으로서 '정보의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우리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보도했다고 본다. 다음은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거나 의혹의 신빙성을 따져 사실관계를 판별하려고 노력했던 보도들이다.

- '화천대유, 1천 배 넘게 수익'..''공공개발로 5천억 환수'(9/17)
- '대법관에 총장' 자문단..''방패막이' 노렸나?(9/25)
- 19개 녹취록 어떤 내용 있길래..대장동 키맨들 조사 임박(9/30)
- 유동규 체포...350억 로비설 '녹취록' 수사는?...''검찰 "10월 내 완료"(10/1)
- 막대한 이익 얻어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누가?(10/7)
- '천화동인 주인은?' 진실게임..내일 김만배 출석(10/10)
- '700억 약정설'..정영학 녹취록 편집..시점 신빙성 논란(10/11)
- 김만배의 '그분' 오락가락 해명..의혹 더 키웠다(10/12)
- 남옥도 입 열었지만..더 꼬이는 '대장동 의혹' 실타래(10/13)
- '돈 흐름' 대신 '녹취록 말' 따라간 검찰..기각 차초?(10/15)
- '사직 강요' 의혹 파장..남옥-김만배 영장 청구 초읽기(10/28)
- '윤석열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조사 착수(11/19)
-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영장 청구에 숨진 채 발견(12/10)
- '대장동 실무'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처장 숨진 채 발견(12/22)
- "같이 출장 갔는데 몰랐다?"..''일일이 기억 못할 수도"(12/23)
- '대장동 5인방' 첫 재판..정진상 조만간 검찰 출석?(1/10)
- 정치권 강타한 '대장동 그분', 실제 조차 없었나(2/21)
-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3/7)
-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착돈'..''박영수와尹은 어떤 인연?(3/7)

특히 지난 1월 10일 대장동 5인방 첫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말했다가 이후 이재명 시장 관련 발언이 논란되자 "공모지침서의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다 취지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우리 보도에서는 김만배 씨측 입장을 CG로 "7개 조항은 성남시 지침 반영, 막대한 이익은 고위험 감수한 결과"라고 표시했다. 반면 많은 언론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시에 지시했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재명 이름을 명시했다. 민실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라는 부연 설명에 따라 '성남시 방침'이라고 표기한 우리 보도가 정확했다고 평가한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MBC는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대선 막판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것을 주목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MBC는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임을 밝히며, 녹취록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김 씨의 발언을 들려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무엇인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실위는 해당 녹취록이 대장동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보도할 가치도 크다고 본다. 다만, 보도에서 대화 당사자가 녹취파일 전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의 맥락 및 녹취록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쉽다.

③ 후보 및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네거티브 VS 검증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데에는 여야 유력 후보 및 후보 가족을 둘러싼 공식 적합성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 및 후보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영역에 해당한다. 민실위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을 무비판적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치권의 정략 공세에 편승한 언론의 직무유기이며,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후보 자질에 대한 검증 보도의 핵심은 보도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MBC가 주목한 의혹은 법치와 공정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민실위는 MBC 보도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 재직 당시 대검에서 작성된 장모 대응·변호 문건과 법원 판결, 검찰 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제기된 의혹 모두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권력의 부당한 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장모 사건 대응 문건'..''윤석열 '검찰 사유화' 의혹(9/14)
- 윤석열 대검, '장모 대응'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9/29)
- '판사 사찰'..''채널A 수사 방해'..''윤석열 징계 정당'(10/14)
- 윤우진 구속 갈림길..''윤석열 입김 의혹'도 풀릴까?(12/7)
- 윤우진 구속됐지만..''윤석열 앞 머뭇거리는 검찰(12/8)
- "윤 총 한테 세 번 걸려"..''윤, '삼부토건 봐주기' 의혹 접미가경(2/25)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철저한 검증 보도 대상이라고 본다. 주가조작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오랜 기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덮여왔다는 점, 해당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줄곧 부인함으로써 정직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라는 점,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MBC는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애썼다.

- 김건희 연루 '주가조작' 의혹 핵심 잠적..''수사 제동?(10/6)
-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재판에(10/26)
- '도이치모터스' 회장 영장 청구..''윤석열 가족 의혹은?(11/12)
- [단독] 권오수 구속..''김건희, 구속된 공범 중 최소 3명과 친분"(11/17)
- [단독] "권오수가 '가짜 확인서' 쓰게 해"..''증거인멸 시도 포착(12/1)
- "주가조작 확인" 구속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12/3)
-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는 총 6개..''280여 차례 '시세조종'(2/23)
- [단독] "尹 장모가 던진 물량, 김건희가 32초 만에 받아"(3/1)
- [단독] "시세 조종 의심 거래, 장모도 37건"..''윤 측 해명 계속 논란(3/1)

배우자 리스크...김건희 vs 김혜경



여야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자질 및 도덕성 관련 의혹 제기도 과거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점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는 숙대 논문 표절 의혹부터 시작해 학벌 허위 기재 의혹, 허위 경력 의혹, 허위 수상 의혹, 뉴욕대 연수 허위 의혹,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역을 담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민실위는 스트레이트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따라 제작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적 발언 일부가 방송에 담을 수 없는 법적 한계, 정파성에 대한 논란 및 녹취록 발언의 파급력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제작진의 고충과 고심을 이해하면서도 보도 내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씨는 통화 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자에 백 만원씩 주고 캠프 강의를 시킨다거나 1억 원을 준다며 캠프에서 일하자고 했다. 또한 "유튜브를 관리하겠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둔다. 감옥에 넣는다" 등의 문제적 발언도 있었다. 공식 직함 없이도 '비선 실세'로서 캠프에 관여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맥락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 다만 이후 이어진 메인 뉴스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 '김건희 녹취록' 파문..''윤석열 "어찌됐든 심려 끼쳐 죄송"(1/17)
- "고발사주는 홍준표·유승민 공작..''안희정은 '문빠'가 죽여"(1/17)
- 김건희 "돈 안 줘서 미투"..''2차 가해 사과하라"(1/17)
- 김건희 "도사들과 대화 좋아해"..''선대본부에도 무속인 참여?(1/17)
- "여기서 지시하면 캠프 조직"..''코바나는 '서초 캠프'?(1/21)
- "너는 검사 팔자다"..''고비마다 점술가 조언?(1/22)

검증의 칼날은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실위는 후보 및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 보도 시간과 비판 수위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정당 간 정확한 균형을 맞춰야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형식적 균형의 준수가 곧 질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시점이 타사보다 늦었다고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선거 국면에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검증이 우선이라고 본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 1월 28일이다. SBS는 <"공무원인데 이 지사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라는 보도를 통해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대리 처방 의혹과 과잉 의전 논란을 제기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씨는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우리는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7일만인 지난 2월 3일, 당사자와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날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 김혜경측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정치권 파장·이재명 사과(2/3)
- '배우자 과잉 의전' 논란 확산에·이재명 "제 불찰" 거듭 사과(2/4)
- 김혜경 '과잉 의전' 사과 "공사 구분 못 했다"·선거 후라도 책임"(2/9)

민실위는 우리 보도가 김혜경 씨의 해명이 아닌 '해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본다. 앞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 다음날 우리는 <"잘못했지만 '허위' 아니다?·해명도 의문투성이"(12/27)>라는 꼭지를 통해 해명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해진 의혹, 또 해명에서 빠져 있는 의혹을 정리하며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검증은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닌 사실 확인에 있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고 본다.

‘후보의 말’은 자질을 검증하는 척도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인격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한다. 특히 대선 후보의 발언에는 후보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담겨 있고 말을 통해 국정 철학과 비전 등을 엿볼 수 있어 후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잣대라고 본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막말과 편가르식 이념 공세의 중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었다.

▶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 발언

- '주 120시간 노동'에 '민란' 발언도...설화 험싸인 윤석열(7/20)
- 가난하면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尹 발언 놓고 논란(8/2)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윤석열 발언 또 논란(8/5)
-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에"...반발 키운尹 기자회견(9/9)
- 尹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당내서도 비판(9/15)
- "집 없어서 청약통장 안 만들어"..."서민 가슴에 대못"(9/24)
- 尹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환자"...해명하려다 또 구설(9/30)
- 尹 "호남 분들도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해"...당 내서도 "망언"(10/19)
- '전두환 옹호' 후폭풍·당대표·참모 건의에도尹 사과 없어(10/20)
- 尹 뒷북 사과 뒤 '개 사과 사진'..."사과는 개나 쥐라?" 일파만파(10/22)
- 尹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이 "로봇을 학대했다니"(11/1)
- 논란 키운 김건희 사과 비정규 교수노조 "심한 모멸감"(12/16)
- 윤석열 호남행..."국민층 못 배운 사람, 자유 모른다" 또 구설(12/22)
- 尹 '국민층은 자유 몰라' 후폭풍..."말실수" vs "특권의식"(12/23)
- 尹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민주화운동 중 수입된 것도"(12/23)
- "3류 바보·미친 짓" 거칠어진尹·與 "막말 폭주기관차"(12/30)
- 尹 "與, 악의적으로 집값 폭등시켜"...'정치보복' 비판은 파시스트 수법"(2/17)
- 尹 "與, 광주 사람들 좋은 물건 현혹돼 투쟁의지 약해질까 쇼핑몰 반대"(2/18,단신)

민실위는 막말과 망언, 지역주의 선동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혐오와 편견을 확산시켜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고 갈등만 키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본다. 또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선동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논란을 촉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발언을 맥락에 맞게 설명하고 충분히 반론을 담으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들 간 기계적 균형성을 의식해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언론 스스로가 구축해놓은 방어막일 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양비론 보도는 정치 불신과 정치 염증을 강화시키고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 여야 후보 막말 공방 보도

- "구두발 본질은 특권의식" VS "김포 집 값도 모르나" (2/14)
- "히틀러·공산주의자" VS "주술사"...막말 유세 공방 (2/18)
- "尹, 日 한반도 개입 발언 망언"...李, 우크라이나 발언 망신"(2/26)
- "버르장머리" VS "겁대가리"...막말에 색깔론·음모론까지(3/1)

‘여가부 폐지’ 공약이 불러온 배제의 정치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담론 중 하나는 젠더 이슈다. 지난 1월 8일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한 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올리면서 젠더를 대선 쟁점으로 끌어올렸고, 멸공 릴레이로 반중 정서를 키웠다. 모두 20대 남성이라는 이대남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었다. 이후 성범죄 무고죄 신설에 이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거나 성인지 예산을 떼어 복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배제 소외시키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줬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멸공 논란의 본질은 혐오에 있다고 본다. 멸공은 상대를 섬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구호에는 논의와 토론 없이 '존치 아니면 폐지'라는 이분법적 선택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보들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위해 동원된 이 같은 갈라치기와 여성 배제 정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정치에서의 여성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MBC가 선거 국면에서 젠더 이슈가 선거 국면의 핵심으로 떠오른 의미와 맥락에 대한 분석 등과 함께 젠더 이슈를 의제로 설정해 비판적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조명했다고 평가한다.

▶ 젠더 이슈에 대한 보도

- '이대남'에 앞다퉈 손짓...여성 인권 팽개치나" 비판도(11/10)
- "여가부 폐지" 입장 바꾼 윤석열 대안 놓고 오락가락(1/8)
- [대선 알고보니] 성평등 정책 차이는? '여가부 폐지' 두고도 충돌(1/18)
- '안희정 옹호' 사과한 이수정 사퇴...이대남' 표만 보나 우려도(1/19)
- 尹 공약 자료에 '오펜케'...'여성혐오 선동하냐"(2/15)
- [대선 알고보니] 윤 "성인지 예산 떼서 복핵 막겠다" VS "무슨 예산인지 아냐?"(2/28)

▶ 멸공 논란

- 尹 '멸치·공'으로 '멸공' 지지?...李 측, 안철수 '첫 견제'(1/8)
- 때아닌 국민의힘 멸공 인증 릴레이에 철 지난 색깔론 우려 제기(1/9)
- '멸공' 논란에尹 "표현의 자유"...'갈라치기' 정치?(1/10)
- 윤석열, '멸공' 논란 이어 "北 도발 조짐 시 선제타격"(1/11)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공약 검증 보도

흔히들 '정책 보도'는 교수와 기자들만 본다고 한다. 쏟아지는 공약과 매일 후보들의 정책 행보 속에서 세부 내용을 검증하고, 또 반대하고 중구난방인 공약들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선거 때마다 정책 검증 보도를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이유로 피상적인 정책 검증 보도에 머무르곤 한다. 민실위는 이번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 검증 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내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TV토론 뒤 후보들이 거저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체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치팀을 중심으로 [대선 알고보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타사보다 빠르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보도를 했고, 타이틀을 달지 않고 보도한 경우도 모두 6회에 이른다.

▶ 대선 알고보니

- "스냅백 전제 동시행동" vs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3/4)
- 윤 "성인지 예산 떼서 복핵 막겠다" VS "무슨 예산인지 아냐?"(2/28)
- 'OECD 꼴찌' 출산율...대선후보들 저출생 대책은?(2/23)
- '국물도 없다'...'기축통화 가능'...토론 발언 따져보니(2/22)
- '징병과 모병 사이'...'병역 개편' 공약 살펴보니(2/18)
- 윤곽 드러낸 '10대 공약'...특징과 차이는?(2/14)
- 김건희 계좌 전부 다 공개?...토론 발언 따져보니(2/12)
- "사드 추가 필요없다" "최저 임금 폐지" 따져보니(2/4)
- 770만 '코인러' 공약 본격화..."국내 발행·비과세 확대"(1/19)
- 성평등 정책 차이는? '여가부 폐지' 두고도 충돌(1/18)
- 황예진법·비동의강간죄...대선후보들 성폭력 대책은?(1/12)
- 너도 나도 "병사 월급 200만 원"...후보별 차이는?(1/11)
- 올 대선 '59초 대전' 스타트...'부실' 우려도(1/10)
- 생활밀착형 공약 경쟁...李 "소확행"尹 "심쿵"(1/6)
- 이·윤 모두 "임대료 지원"...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1/3)
- 부동산세제, 李 "완화"尹 "더 완화"沈 "강화"(12/28)
-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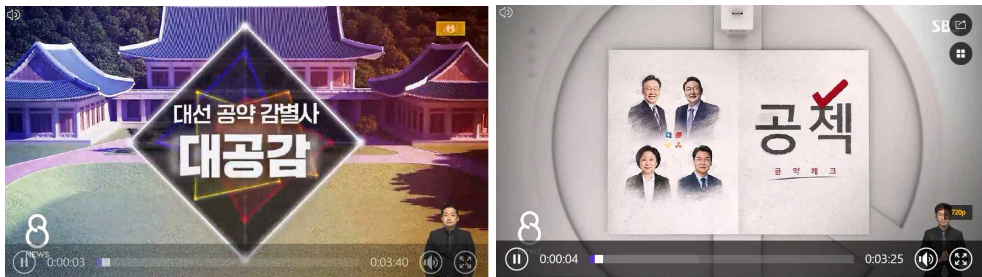
▶공약 정책 비교

- "산업재해 없어야" 한목소리·방법은 '입장차' 뚜렷(12/10)
- 이·윤, '최저 임금' 다른 시선·"보장해야" vs "유연하게"(12/6)
- 이 "일본 우경화가 문제" vs 윤 "죽창가 부른 정부 탓"(11/26)
- 이·윤·종전선언·한일관계 등 현안마다 '상반'된 시각(11/25)
- 이 "고품질 공공 기본주택" vs 윤 "세금 내리고 규제 푼다"(11/17)
- "일본 우경화는 현 정부 책임"·불붙은 외교 논쟁(11/13)

KBS는 지난 1월 11일부터 유권자가 꼽은 10대 의제(청년공약,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외교안보, 재난 대응, 집값 안정, 세제, 주거취약계층, 일터 안전, 저출생, 고령화, 사회갈등)를 중심으로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라는 타이틀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검증 보도를 했다. 또한 1월 24일부터는 [공약 돋보기]로 12회에 걸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쪼개기 상장, GTX 연장과 신설, 플랫폼, 촉법소년, 동물 복지, 노동 시간, 소방관 고통,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복수의결권, 병사월급 2백만원, 초등 돌봄교실 연장) 세부 공약 검증 보도를 했다.



SBS도 지난 1월 7일부터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공약감별사]라는 타이틀로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부동산, 세금, 청년, 보육, 국방, 교육)을 6차례에 걸쳐 집중 검증하는 보도를 했고, 대선 후보들의 세부 공약은 [공약 체크]라는 타이틀로 11회(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북핵 문제 해법, 연금 개혁, 기후 대응과 에너지 문제, 사법 개혁 분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소상공인 공약, 음주운전, 대입 정책, 보건 의료 공약)에 걸쳐 보도했다. SBS의 공약 체크 보도는 독자팀을 구성한 KBS와 달리 관련 분야 전문가가 맡아서 보도한 특징을 보였다.



민실위는 정책·공약 검증 보도가 한국 사회에 놓인 복잡다단한 여러 현안과 시대적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해결책 논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메인 뉴스에 현실진단-공약 소개-공약 검증 순으로 하나의 의제에 대해 10분 이상씩 할애하는 KBS의 10대 공약 분석 보도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약의 세부 내용을 체크하는 SBS의 분석 보도 시도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됐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무게감 있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 후보들 공약에 대한 비교와 차이점을 전달해 유권자 스스로 판단을 맡기는 방식과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나은지다. 전자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공약 검증의 전문성은 강화되지만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자칫 정치 혐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대선과 비교해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유력 후보들에 의해 배제되고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사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제가 다양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여론조사...민심 반영 VS 현실구성의 도구로 악용

지난 두 달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283건에 이른다. 지난 대선에 비해 100건 넘게 늘어났다. 특히 오차범위 안과 밖, 우위 후보가 조사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언론사별로 연일 쏟아지면서 유권자 혼란을 부추겼다. 또한 조사 방법과 대상, 질문지 설계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한 권위 부여 관행이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현실구성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도하거나,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의미 부여에 나서거나, 다른 조사방식의 여론조사를 동시 비교하며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기도 했다. MBC는 여야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지난해 11월 초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난 3일 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간격도 2주 또는 1주를 유지했고, 모니터상 오차범위 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도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검증의 영역인 배우자 리스크나 후보 가족 문제를 질문 내용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는데 우리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주거안정, 정치개혁, 부정 비리청산 등 정책 위주로 질문을 짰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호감도가 아닌 문제 대응 방식을 질문해 현실 구성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았다. 또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여론M(<http://poll-mbc.co.kr/>)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교한 여론조사 흐름을 제공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이념별·정당별 후보자 지지율에 대해 정보 제공자에 머무르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본다.



영상 편집의 불편부당성

유세와 TV토론에서 비친 후보 및 선거 관련 영상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민실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일 메인 뉴스에서 방송된 선거 관련 보도 237개 꼭지를 전수 분석했다. 모니터의 잣대는 영상 화면 구성에 있어 일관되게 균형감을 맞추었는지다. 과거 MBC 보도에서는 촛불 집회는 의도적으로 인파가 적게 보이도록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태극기집회는 인파가 가득한 것처럼 확대 시키는 인위적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세 현장에서 인파를 가늠할 수 있는 화면은 통상 부감 샷과 풀 샷이다. 민실위는 영상취재기자회와 함께 타사 보도와 비교해 모니터상 의심되는 부분이 제기될 때 촬영 화면 원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를 진행해왔다. 민실위는 쏟아지는 유세 현장 그림과 촉박한 제작환경에서 영상 취재·편집 구성원들이 시각적 균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비호감 대선이 낳은 '선거보도의 미래'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와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후보들의 상식 밖 언행도 유권자들의 실망을 키웠다. 더욱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 조성 책임에서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혹자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서 선거 보도의 신뢰성이 더 추락했다고 한다. 과도한 정파성, 단순 중계방송, 후보자나 정당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없는 따옴표 저널리즘, 정책 검증 보도 실종과 과도한 정치공학적 보도 등은 지적돼 온 선거 보도의 관행과 탈피해야 한다. 투표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듯 선거 보도의 주인공은 선거기간 내내 후보가 아닌 유권자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민 대다수가 보도를 접하는 경로로 굳어진 포털 등 뉴스 환경, 정치적 성향에 따라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확증편향 속에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품격있는 정치 뉴스를 실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 우리 스스로 과거에 안주하며 선거 보도 양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의 위기를 선거 보도 관행을 바꾸거나 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이제 곧 지방선거다.